

< 2018 국회8급 행정학 기출문제 >

0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정답] ① 국세 중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이다.

● 국세(내국세)의 세목 ●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0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기>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 ④ 관료제에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③ 보기의 사례는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주

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즉 관료제의 병리현상 중 무사안일주의나 변동에 대한 저항에 해당한다.

0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보기〉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 | | |
|-----------|---------|
| ① 과학적 관리론 | ② 공공선택론 |
| ③ 행태주의 | ④ 발전행정론 |
| ⑤ 현상학 | |

[정답] ②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공공선택론이다.

0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 ④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답] ⑤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0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ㄷ

⑤ ㄷ, ㄹ, ㄷ

[정답] ③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ㄴ, ㄷ, ㄹ 이다.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하향적 집행이다.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이란 문제의 인지 및 목표설정, 대안의 총체적, 포괄적 탐색과 대안의 비교·평가, 최적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며 이를 반영한 것이 하향적 집행이다. 즉 정책결정자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자는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하향적 집행이다. 반면 상향적 집행은 정책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행자가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집행하므로 선형적 시각과는 거리가 있다.

ㄷ.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한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상향적 접근은 공식적인 정책목표보다는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다.

0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③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답] ③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

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07.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② 재의요구권
- ③ 기금의 설치·운용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정답] ②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0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정답] ④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정부조직의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편익의 괴리 등이 있다.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은 정부실패의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0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기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규제의 역설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 ④ 각 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① 행태주의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하므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의 문제를 연구대상 제외한다.

- ②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실증주의를 강조하는 행태론이다.
-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보다는 과학적 연구를 중시한다.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하는 것은 후기행태주의이다.
- ⑤ 행태주의는 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므로 제도의 변화와 개혁의 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고객정치
⑤ 소비자정치

[정답] ①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규제의 편익(교통소통 원활)과 비용

(부제실시로 인한 불편)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대중의 정치에 해당한다.

구 분		규제의 비용(cost of regulation)	
		집 중	분 산
규제의 편익 (benefits of regulation)	집 중	이익집단정치 (interest group politics)	고객의 정치 (client politics)
	분 산	기업가적 정치 (entrepreneurial politics)	대중(다수)의 정치 (majoritarian politics)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위해제 :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 ② 직권면직 :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 ③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 ④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 ⑤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정답] ⑤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이다.

- ①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직권면직은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 ③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가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재직기간 5년 미만) 내지 1/4(재직기간 5년 이상)이 지급 제한될 수 있다.
- ④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내지는 1/2(재직기간 5년 이상) 지급이 제한된다.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 ② 허즈버그(Hezberg)의 욕구충족이론
- ③ 앨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 ⑤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정답]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은 공정한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이다.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정답]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명시이월
- ② 예비비 사용
- ③ 예산의 이용
- ④ 계속비
- ⑤ 예산의 이체

[정답] ⑤ 예산의 이체는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기획재정부장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적 관점
- ② 프로그램적 관점
- ③ 고객 관점
-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 ⑤ 학습과 성장 관점

[정답] ②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은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적 관점은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 ② 직급 :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

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③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④ 직류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⑤ 직군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정답] ⑤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은 직무등급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옳은 것은 ㄱ, ㄴ 이다.

ㄷ. 체제론은 계서적(계층제적) 관점을 중시한다. 체제론은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 체제(system)를 이룬다고 본다. 따라서 체제는 다시 하위체제(sub-system), 하위체제는 다시 하위체제(sub-system)를 형성하므로 체제는 계층성을 가지게 된다.

ㄹ.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정치, 사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불균형성장을 강조한다.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는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보다는 비정의성(공무수행시 사적 감정의 배제)을 강조한다.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숙효과 :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 ② 회귀인공요소 :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 ③ 호손효과 :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
- ④ 혼란변수 :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 ⑤ 허위변수 : 정책과 결과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정답] ③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는 크리밍 효과이다.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 ② 민간-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 ③ 규제완화
-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 ⑤ 정치적 통제 강조

[정답] ③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는 분절화 축소를 위해 재규제를 주장한다. 반면 신공공관리론(NPM)은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③ 예산안편성지침
-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 ⑤ 예산요구서

[정답] ③ 예산편성에 관한 국가재정법 규정을 응용한 문제이다.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③ 자기역량 강화
-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정답]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은 근무성적평정이 아니라 역량평가에 해당한다. 즉 역량평가는 대상자의 과거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 ① 내용타당성
- ② 구성타당성
- ③ 개념타당성
-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정답] ①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내용타당성이다. 예를 들어 타자수 선발시험에서 실제 근무상황에서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서류양식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나 취재기자 선발시험에서 일반적인 논술주제가 아닌 구체적인 기사작성을 시험문제로 출제할 경우에 내용타당성은 확보될 수 있다.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

다.

- ①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 [정답] ② ①은 재분배정책으로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분배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①과 ④는 배분/분배정책, ③은 구성정책, ⑤는 규제정책에 해당한다.